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제 [ ] 선택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등학교 학생회가 학교 축제 운영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는 합리적 방안 모색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교사

정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치란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현상으로 국가의 권력적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갑

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는 모든 사회 집단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을

- 1. 갑의 관점은 국가의 의사 결정 활동과 국가 이외 사회 집단의 의사 결정 활동을 모두 정치라고 본다.
2. 을의 관점은 사회 집단 내에서 권력이 형성·분배되는 과정을 정치라고 보지 않는다.
3.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통한 사회 질서 유지와 갈등 해결 과정을 정치라고 본다.
4. 을의 관점에 비해 갑의 관점은 한정된 자원 배분과 관련된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정치 주체가 더 다양하다고 본다.
5. 갑의 관점과 을의 관점 모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2.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3점]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결성된 A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B의 공약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 B는 공직 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아 공약을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며, C는 자신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충돌하는 공약을 B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 1. A는 정권 획득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2. B는 정치 과정에서 정책 집행의 주체인 국가 기관이다.
3. A와 달리 B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을 형성한다.
4. B와 달리 C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진다.
5. A와 C 모두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3.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국가 권력 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다면 그 내용과 관계없이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 B는 법률이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의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 1. A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일지라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
2. B는 법률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3. A와 달리 B는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이 의회가 미리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4. B와 달리 A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A와 B 모두 행정 작용과 달리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우리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제법을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A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B의 실현에 필요한 국내법 체계를 보완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 1. A를 실현하기 위해 법률로써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2. A에 따르면 대통령이 국회 비준을 거쳐 체결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B는 적절한 소득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경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4. B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5. B와 달리 A는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다.

5.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긴급성은 법을 모른다.'는 법언처럼, 현재의 위난에 처한 사람의 법익 보호를 위해 타인의 법익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긴급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A에 해당한다. 한편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법언에 따라 현재의 부당한 침해 행위로부터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는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B에 해당한다. A와 B 모두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정당화되어 처벌되지 않는 사유이지만, B는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난이 위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A와 구별된다.

<보 기>

- ㄱ. 'A로 인정되는 타인의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B가 인정되지 않는다.
ㄴ. B와 달리 A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ㄷ. A와 B 모두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ㄹ. A 또는 B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유추 해석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 2 (정치와 법)

## 사회탐구 영역

6.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지방의회,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중 하나임.)

교사: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A, B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갑: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조사권이 있습니다.  
 을: B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병: A와 달리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으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교사: 두 사람의 설명은 옳고, 나머지 한 사람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① A는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지방 행정 사무를 총괄한다.
- ②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 ③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B와 달리 A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민 소환 제도가 있다.
- ⑤ A와 B 모두 중앙 정부와 수평적 권력 분립 관계에 있다.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을이 에어컨 실외기 교체를 위해, 갑은 설치 업체 사장 병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의 직원 정이 공사 중 실외기를 떨어뜨려 갑의 자동차를 파손하였다. 한편 을의 종업원 A는 B가 주문한 음식과 상한 유제품을 포장하여 배달하였고, 이를 먹고 배탈이 난 B가 을의 식당에서 항의하던 중 낡은 천장이 무너지며 을과 B가 다쳤다. 주문한 식사의 지연으로 화가 난 손님 C(17세)는 시비 끝에 A를 폭행하였고, 다친 A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C의 법정 대리인은 D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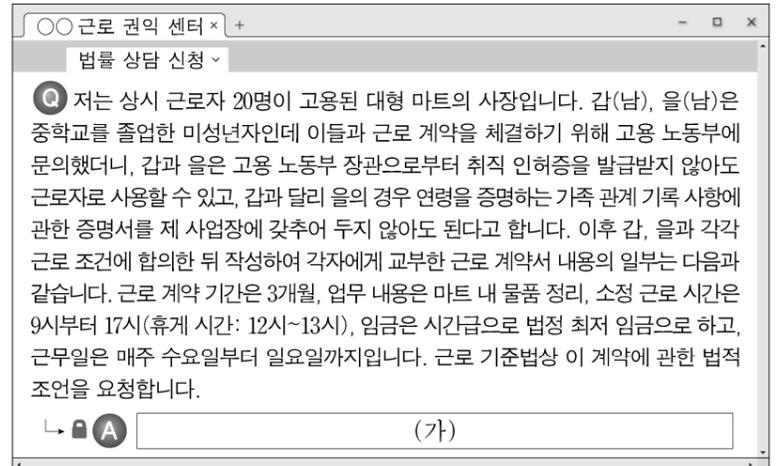
- ① 을은 B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고, 병은 갑과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 ② 을이 공작물 점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으면 갑은 B뿐만 아니라 을에게도 공작물 소유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③ 병이 정에 대한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도 병은 갑에게 사용자로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 ④ C가 A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A는 C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다.
- ⑤ C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더라도 D에게 법적 감독 의무 위반이 있으면 D는 A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8.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죄로 기소된 갑은 기한을 넘겨 국민 참여 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 지방 법원 합의부는 갑의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불복한 검사가 상소하였다. A는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상소하였으나 B는 이를 기각하였다. 한편 을은 □□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 상고하였다. 을은 ◇◇법 조항이 자신의 사건을 합의부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 참여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고 상고심 계속 중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B에 신청하였다. B가 이를 기각하자 을은 C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고, C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① A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한 검사는 상고하였다.
- ② B는 갑과 을의 사건 모두 국민 참여 재판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 ③ A와 달리 B는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 소송을 관할한다.
- ④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A는 직권으로 이에 대한 심사를 C에 신청할 수 있다.
- ⑤ 을은 C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B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였다.

9.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갑과 주휴일에 대해 합의했다라도 주휴일을 서면으로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 ② 갑이 일요일에 근로 계약 내용대로 근무할 경우 갑에게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③ 을의 근로 시간을 매 근무일 2시간씩 연장하는 것은 을과의 합의가 있어도 근로 기준법에 위배됩니다.
- ④ 갑과 을에게 적용되는 법정 근로 시간은 동일합니다.
- ⑤ 갑과 을 각각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 \sim t+3$ 시기 중 정부 형태는 1회 변경되었고,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며, 각 시기의 정부 형태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다.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은  $t+1$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서 모두 원내 제1당이다. 갑국 의회의  $t$ 시기 정당별 의석수는 A 당 160석, B 당 120석, C 당 20석이며, 표는 시기별 각 정당의 직전 시기 대비 의석수 증감률을 나타낸다.

구분	A 당	B 당	C 당
$t+1$ 시기	-40%	+50%	+20%
$t+2$ 시기	+25%	-20%	+50%
$t+3$ 시기	-15%	+25%	-50%

\*  $t \sim t+3$ 시기에 총의석수는 300석으로 동일하고, 각 시기 내의 정당별 의회 의석수,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 ①  $t+1$ 시기에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내각 불신임 결의로 국정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 ②  $t$ 시기에 내각의 존립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한다면,  $t+2$ 시기 의회는 여대야소 상황이므로 행정부 수반이 제출한 법률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 ③  $t+3$ 시기에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라면,  $t$ 시기에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없다.
- ④  $t+2$ 시기에 내각이 의회 해산권을 가진다면,  $t+3$ 시기 행정부 수반과 달리  $t$ 시기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 ⑤  $t+1$ 시기와  $t+3$ 시기에 정부 형태가 서로 같다면,  $t+2$ 시기와 달리  $t$ 시기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엄격하게 보장된다.

####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17세)은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전자 대리점 사장 병(35세)과 ㉠ 고가의 노트북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병은 다음날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노트북 구매로 인해 사용하던 태블릿 PC가 필요 없게 된 갑은 정(22세)에게 이를 판매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에게 을 명의의 동의서를 제시하였으며, 정은 다음날 동의서가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다.

- ① 갑과 정 의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을에게 있다.
- ② 병의 사기로 ㉠이 체결된 경우라면, 을은 사기를 이유로 ㉠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병과 달리 정은 갑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④ 병이 을에게 합의를 촉구하여야 을은 갑과 병의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 ⑤ 갑과 달리 을은 갑의 행위 능력 제한을 이유로 갑과 정 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2. 기본권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침해 배제함으로써 보장되는 A와 달리 B는 국가가 인간 존엄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을 형성함으로써 보장된다. 자본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생성·발전되어 온 B가 확대될수록 A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A와 B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 발현이라는 헌법 이념 아래에서 조화된다.

- ① A는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② B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한 적극적 권리이다.
- ③ B에는 '외부로부터의 강제 없이 개인의 양심을 형성할 권리'가 포함된다.
- ④ A와 달리 B는 국가 기관의 형성과 국가의 정치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 ⑤ A와 B 모두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하더라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는 권리이다.

#### 1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사 책임은 (가)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구성 요건 해당성 판단에서 행위자에게 구성 요건 실현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 책임과 구별될 수 있다. 갑이 지나가던 을과 부딪쳐 을의 휴대 전화를 파손한 상황을 가정해 보자. 갑이 일반인이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였더라도 을의 휴대 전화를 파손하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면 갑의 행위는 인식과 의사를 구성 요건 요소로 하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갑의 파손 행위로 인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민법상 (나)이 성립되어 갑은 을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 ① (가)의 성립에 따른 형사 책임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고유의 목적으로 한다.
- ② (나)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는 고의에 의한 경우이든 과실에 의한 경우이든 차이가 없다.
- ③ (나)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가해 행위가 법이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성립된다.
- ⑤ 갑의 행위가 (가)로 성립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을은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 1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42세)은 동창생 을(43세)에 대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 제기되었다. 공판 중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갑은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을은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갑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조심하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본 갑이 고소하여 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을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되었다. 을은 법정에서 동창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한 일이라고 진술하였고, 법원은 을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을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보 기>

- ㉠. 공판 단계에서 구속된 갑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 주어야 한다.
- ㉡. 갑은 집행 유예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2년을 경과하면 형 선고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 ㉢. 갑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을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수사 기관에 하였다.
- ㉣. 법원은 을이 글을 게시한 행위가 ○○법 조항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평가 문항]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옳으면 '예', 틀리면 '아니오'를 쓰시오. (답란별로 채점하며 옳으면 1점, 틀리면 0점, 총점은 3점임.)

<사례> 갑(27세)과 을(28세)은 법률상 혼인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A를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였다. 갑과 을은 협의상 이혼하였고, A는 갑이 양육하기로 하였다. 병(27세)은 정(25세)과의 혼인 중 B를 출산하였고 정과 재판상 이혼한 뒤 B를 홀로 양육하였다. 이후 갑은 병과 혼인하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B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이후 갑과 병 사이에 C가 태어났고 갑과 병은 미성년자인 A, B, C와 함께 살고 있다.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		답란
(가)		아니오
B는 입양으로 인해 정과의 친자 관계가 종료된다.		(나)
갑과 을이 유언 없이 동시에 사망한다면 A는 갑의 상속인이 되고 을의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아니오
채점 결과(점수)	(다)	

- ① (가)에 '갑과 을의 이혼은 가정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고, 이후에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성립한다.'가 들어가고 (나)에 '예'가 들어간다면, (다)에 '2점'이 들어간다.
- ② (가)에 '병과 정 의 이혼은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가 들어가고 (나)에 '아니오'가 들어간다면, (다)에 '1점'이 들어간다.
- ③ (가)에 '병이 유언 없이 사망한다면 A, B, C는 모두 병의 상속인이 된다.'가 들어가고 (나)에 '예'가 들어간다면, (다)에 '3점'이 들어간다.
- ④ (다)에 '1점'이 들어간다면, (나)에 '예'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다)에 '3점'이 들어가고 (가)에 '갑과 병의 혼인 중 갑이 일상 가사에 관해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한 때, 병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다.'가 들어간다면, (나)에는 '예'가 들어간다.

# 4 (정치와 법)

# 사회탐구 영역

16.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 관계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므로 국가 간 갈등의 해소와 이해의 조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제기구를 통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고 국제적 협력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갑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 간 상충되는 이해의 조화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공동의 규칙을 수립하고 준수함으로써 국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을

- ① 갑의 관점은 국가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힘의 배분 양상을 강조한다.
- ② 갑의 관점은 모든 국가들의 상호 불가침 약속과 그 약속 위반 국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집단적 대응을 강조한다.
- ③ 을의 관점은 국제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초국가적 행위 주체의 역할을 간과한다.
- ④ 갑의 관점과 달리 을의 관점은 국가가 타국과의 경쟁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본다.
- ⑤ 을의 관점과 달리 갑의 관점은 국가들이 국제 규범을 통해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17.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국제 연합 헌장에 따르면 A가 국제 사회의 분쟁 또는 사태와 관련하여 헌장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B는 A의 요청이 없이는 어떤 권고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A가 논의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B가 독자적으로 권고를 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사법 기관 C는 A가 주로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에 집중하는 반면 B는 인도주의적·사회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고려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B의 권고는 헌장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C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A 및 B에서 선출된다.

- ① B에서 절차 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상임 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이사국 이상의 찬성 투표로 결정한다.
- ② 국제 사회의 일반적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은 국제 규범이라도 성문화가 되어야만 C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있다.
- ③ 국제 사회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개인은 C의 재판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④ A와 달리 B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군사적 제재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⑤ B와 달리 A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표결 시 각 국가가 1표씩 투표권을 행사한다.

18. 민법의 기본 원칙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근거로 하는 A는 거래상 법률관계의 형성을 국가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 놓인 개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등장한 B는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거래상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본다.

- ① A에 따르면 개인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 ② A는 국가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강제하는 근거가 된다.
- ③ B에 따르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 행위도 유효하다.
- ④ B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강자의 부당한 대우를 정당화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⑤ A와 달리 B는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사상에 기초한다.

19.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우리 헌법에는 국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나타나고 있다. A가 B의 장(長), C의 장(長), D, 감사원장, 대법관을 임명할 때 E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무 위원 임명 시 D의 제청을 요건으로 하며, A뿐 아니라 B의 장(長)과 E도 C의 구성에 관한 권한을 나누어 갖도록 규정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① A에 대한 E의 견제 수단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들 수 있다.
- ② B의 구성원은 D의 제청을 받아 A가 임명한다.
- ③ C에 대한 B의 견제 수단으로 '권한 쟁의 심판권'을 들 수 있다.
- ④ D에 대한 C의 견제 수단으로 '탄핵 심판권'을 들 수 있다.
- ⑤ A와 E 모두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 의회는 단순 다수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10인, 비례 대표 의원 10인으로 구성되며,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 1표,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1표를 행사한다. 비례 대표 의석은 정당 투표 득표율에 비례 대표 총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표는 최근 갑국 의회 의원 선거 결과를 나타낸다.

(단위: 표, %)

구분	A당	B당	C당	D당	E당
선거구 1	120	150	25	45	65
선거구 2	100	125	45	65	40
선거구 3	85	75	50	20	15
선거구 4	65	45	70	35	25
선거구 5	150	80	45	65	20
선거구 6	65	95	30	25	45
선거구 7	100	80	65	30	20
선거구 8	60	75	35	15	45
선거구 9	110	65	30	45	35
선거구 10	90	105	25	75	10
정당 투표 득표율	31.6	22	15	12.4	19

\* 정당은 A~E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갑국은 다음과 같이 선거 제도 개편안을 검토 중이며 개편안 적용 시 C당과 D당은 합당하여 F당으로 창당한 후 선거에 참가한다. 개편안은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하며,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C당, D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했던 유권자는 모두 F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C당, D당에 투표했던 유권자는 모두 F당에 투표한다고 가정한다.

<1안>	현재의 총의석수를 기준으로 현행 비례 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할당한다. 각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단순 다수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수를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정한다. 만일 어떤 정당의 지역구 의원 의석수가 할당된 의석수보다 더 많다면 초과 의석을 인정되 비례 대표 의석은 배분하지 않는다. 초과 의석으로 인해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定數)는 늘어날 수 있다.
<2안>	현재의 총의석수를 유지하면서, 선거구 1~선거구 10에서 득표순으로 2인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한다. 각 정당은 선거구별 1명의 후보자를 공천한다.

- ① 현행에서 A 당과 B 당의 의석수 차이는 1석이다.
- ② <1안> 적용 시 B 당이 얻는 초과 의석수는 2석이다.
- ③ <1안> 적용 시 F 당은 현행에서 C 당과 D 당이 얻은 의석수의 합보다 1석을 더 얻게 된다.
- ④ <1안> 적용 시와 <2안> 적용 시 F 당의 총의석수는 동일하다.
- ⑤ <2안> 적용 시 A 당과 E 당의 의석수 차이는 <1안> 적용 시 A 당과 E 당의 의석수 차이의 4배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